

대한민국

2011 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

보고서

2012 년 7 월 31 일

개요: 대한민국은 2011 년에 대테러 노력을 확대했다.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을 비롯한 다수의 정보 기관들은 미국 및 국제 정보 기구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복수의 대테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일조했다. 대한민국 정부는 대테러 비상 대응 체제를 검토하고 강화시켰다.

2011 년 9 월에 미국 연방수사국 한국 지부는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과 협조하여 한국에 입국한 국제 테러 용의자를 공동으로 수사했다.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용의자를 출국 전까지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.

법률 및 사법 집행: 대한민국 정부는 2005 년 9 월에 국제핵테러억제협약(ICSANT)을 조인했으며 2011 년 12 월에 국회의 비준을 얻었다.

테러 자금 방지: 한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및 그와 유사한 형태의 지역 내 기구인 자금세탁에 관한 아시아-태평양 그룹(APG)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. 국회는 2010 년 10 월에 금융정보분석원(FIU)이 제출한 '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을 9 월에 통과시켰다.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법안에 중요한 수정을 가했다. 법률 개정안은 공중협박자금을 모집·제공하거나 운반·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동산, 부동산,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한 처분행위 등을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추가시켰다.

2010 년 12 월에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'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다. 동 법률 개정안은 당해 연도 말에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.

자금세탁방지 및 금융 범죄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[2011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\(INCSR\), 제 2 권, 자금세탁 및 금융 범죄](#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웹사이트:

<http://www.state.gov/j/inl/rls/nrcrpt/index.htm>

지역 및 국제 협력: 한국은 유엔, 아시아-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,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EAN) 지역포럼, ASEAN+3, 동아시아 정상회의, 아시아-유럽 정상회의(EC, 유럽연합 27 개국, ASEAN 플러스 13 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간 포럼), 아시아 협력대화, 동아시아-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, G20,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. 또한, 한국은 유럽안보협력기구와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에도 파트너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.

2011 년에 한국 정부는 다수의 국제 회의를 조직하여 정보와 선진사례를 공유했다. 6 월에는 제 7 차 세계핵테러방지(GICNT) 총회, 9 월에는 제 3 차 APEC 사이버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. 또한, 12 월에는 FATF/APG 자금세탁 유형론 워크숍을 개최했다.

한국 정부는 미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, 알제리, 우즈베키스탄, 이스라엘 정부를 상대로 양자간 대테러 협의를 실시했다.